

---

# Seo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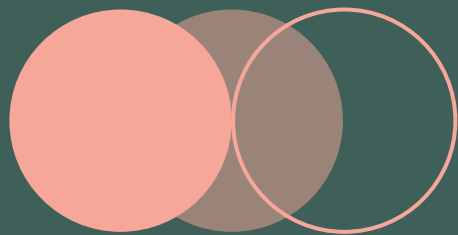
2023  
No.6

# Economic

---

# Issue Brief

---



서울경제이슈브리프

---

## 3고 시대, 서울시 중소기업의 도전과 과제

---

노용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서울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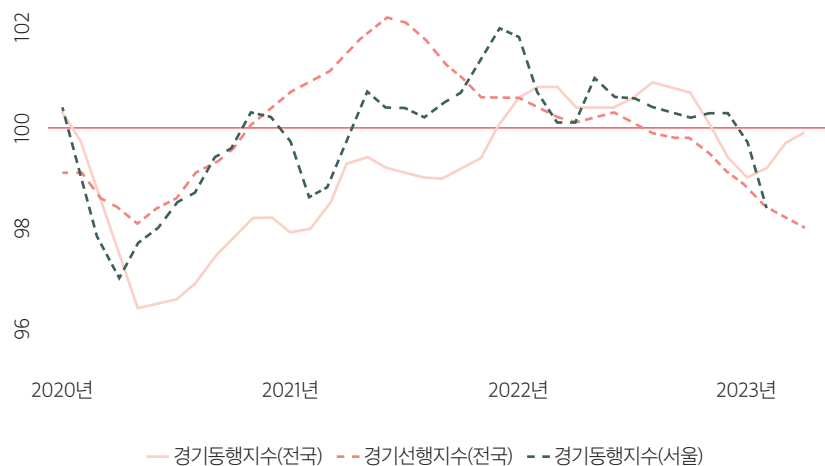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01 3고 위기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직면

- 2023년 6월 현재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는 격차가 최대 1.75% 포인트로 사상 최대 수준인데, 한국은 자본시장개방도와 교역의존도가 높아 물가안정과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
- 에너지·금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국우선주의로 대표되는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원자재 수출통제 등이 생산자물가지수의 급등을 초래
- 기축통화국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빨라 원/달러 환율도 급상승하였으며,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입물가는 상승하여 국내 생산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경기·금융 불안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그림 1] 경가지수 순환변동치(2020년 1월~2023년 5월)(2020년=100)



\* 주: '경가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가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임. 추세치 100을 기준으로 순환변동치가 100을 상회하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100을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순환변동치 수준보다는 방향 중심으로 해석

\* 출처: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고 여건은 수요 측면에서 민간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급 측면에서는 투자 지연, 한계중소기업 증가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 가계신용잔액<sup>1)</sup>은 2023년 1/4분기 기준 1,853.9조 원으로 2022년 명목GDP의 85.8%에 달해 추가 금리 인상은 가계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소비와 고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
- 전국의 '경기동행지수'는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나타난 2021년의 경기반등이 1년 만에 다시 둔화 추세로 전환해 2022년 말부터 100 미만으로 하락
- (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기동행지수'도 2023년 들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예고

1) 일반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

세계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조 변화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 증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패러다임 전환 모색

- GVC 구조 변화의 심화는 한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간 생산 네트워크 체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의 중요성을 의미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터, 블록체인 등 와해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융·복합화 촉진, 제품의 스마트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전통산업의 가치사슬 와해 촉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 격차, 종사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보상격차 해소에 포용적 성장 문제가 이슈화

생산과 자원관리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전기차·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으로 지속
- 중국의 통관 비관세 장벽, 미·중 패권갈등, 자원보유국의 보호무역 기조도 자국우선주의 경향을 잘 설명해 줌

## 02 3고 경제위기에 마주 선 중소기업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변동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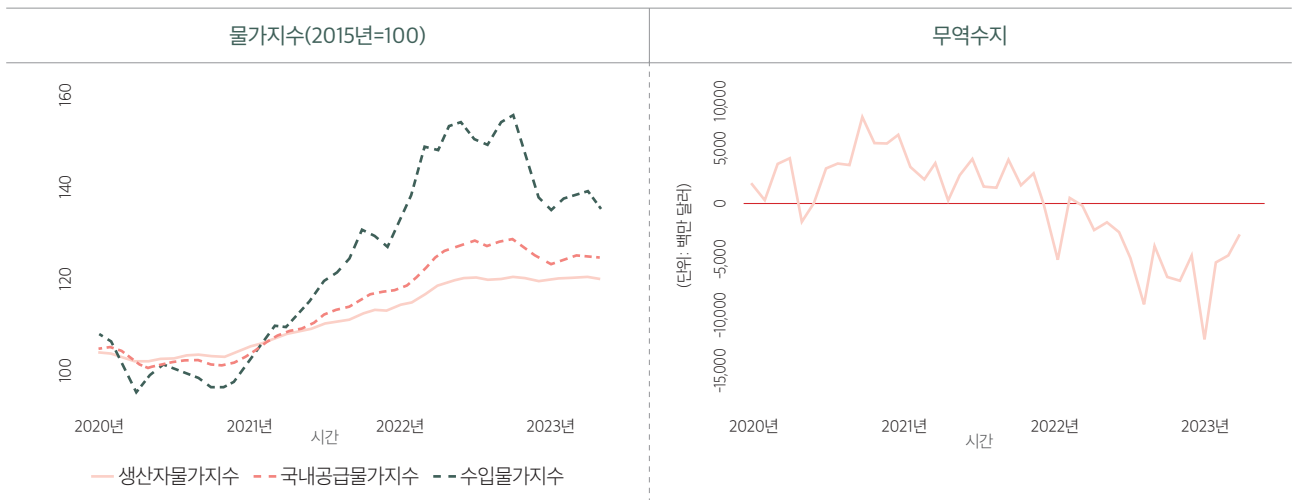
- 환율 급등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공급물가지수(2015년=100)<sup>2)</sup>는 2022년 10월 128.9라는 최고수준을 기록해 중소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1~3월 계속 상승했다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내린 영향으로 4월부터 2개월간 다소 하락

한국경제는 교역의존도와 자본시장개방도가 높아 대외 충격에 취약한데, 2021년 12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는 추세

- 무역수지 적자는 소득감소, 고용악화, 대외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세입·세출과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원화 가치의 불안정성과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됨

2) 원재료와 중간재를 포함하는 공급물가지수로 2015년 100을 기준지수로 함

[그림 2] 생산자물가지수와 무역수지(2020년 1월~202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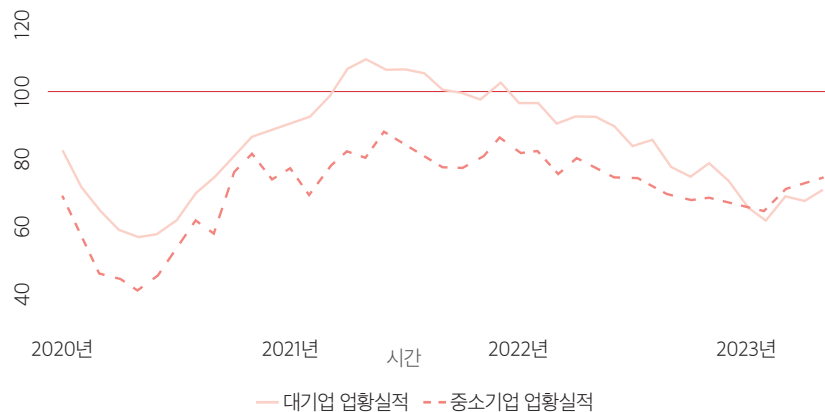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조사」; 한국은행, 「국제수지동향」

###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가지는 경기체감도는 2022년부터 하향 추세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업황실적 실사지수(BSI)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2022년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 기간에 있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남

[그림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실적(BSI) 추이 비교(2020년 1월~2023년 5월)



\* 주: 실사지수(BSI) = 기준값(100) + '좋은' 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 응답업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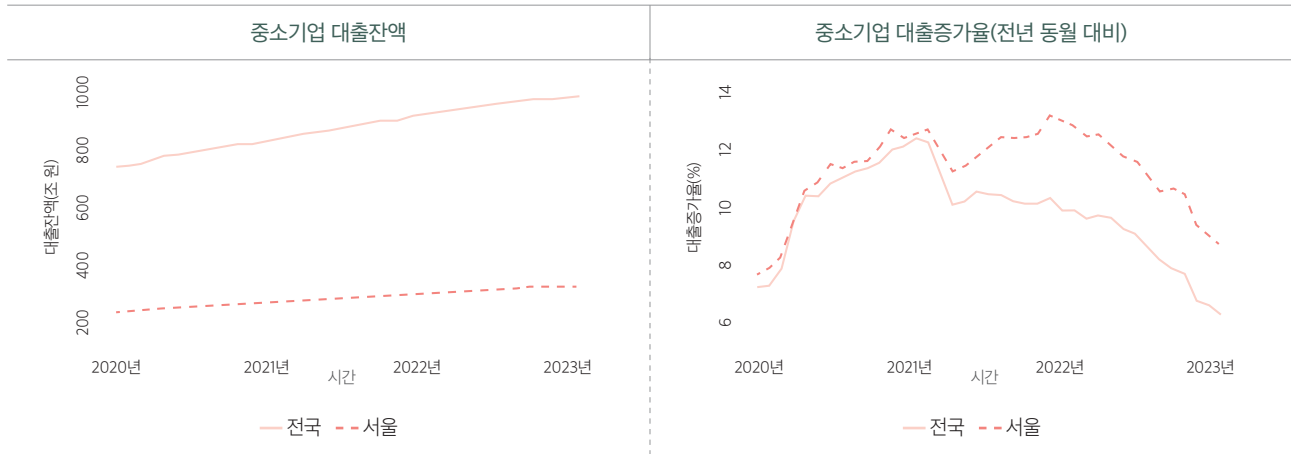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 경기침체와 높은 조달금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양산할 우려도 존재

- 서울과 전국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 3월말 기준 기업의 은행대출 잔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81.1%(964.8조 원) 수준이며, 서울은 전국 중소기업 대출의 34.2%(329.5조 원)를 차지
- 2021년 중반 이후부터 서울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출증가율은 2022년 1월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
- 2022년 11월까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급상승했는데,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시설·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주식·채권 발행)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

서울의 경기동행지수는 전국의 경기동행지수와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긴축재정으로 고금리와 저 성장에 대한 경기대응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

[그림 4] 은행 중소기업대출 추이(2020년 1월~2023년 3월)



\* 주: 예금은행 기업대출 말잔 기준

\* 출처: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현재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역성장(2020년 -0.7%)으로부터의 기저효과에 의한 회복세가 꺾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복합위기에 노출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대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sup>3)</sup>
-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5.25% 수준에서 2009년 2월 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생산·고용 등의 외형 경기지표가 회복에 1년여 소요
- 2020년 ‘코로나19 역성장’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기조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이전의 경제위기 때보다 원활했고 회사 채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2021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반등이 가능
- 그러나 현재와 같은 3고 시대에 인플레이와 기준금리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상국면으로의 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한국경제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

- 국회예산정책처(2022)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2~2026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하락 추세에 따라 연평균 2.2% 수준일 것으로 추정
- 빠른 고령화와 청년 노동력 감소 등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중 간 대립이 세계 교역 위축, 금융시장 경색으로 발전할 경우 양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플랫폼 경제 확산,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친환경 구조전환, 양극화 문제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경제성장률은 낮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여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이슈가 정책선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실제, 2022년 한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sup>4)</sup> 비율은 49.65%(1,068.8조 원)로 5년 전인 2017년(36.0%) 대비 408.6조 원이나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1,134.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KDI(2023.5) 1.5%, 한국은행(2023.5) 1.4%, IMF(2023.4) 1.5%, OECD(2023.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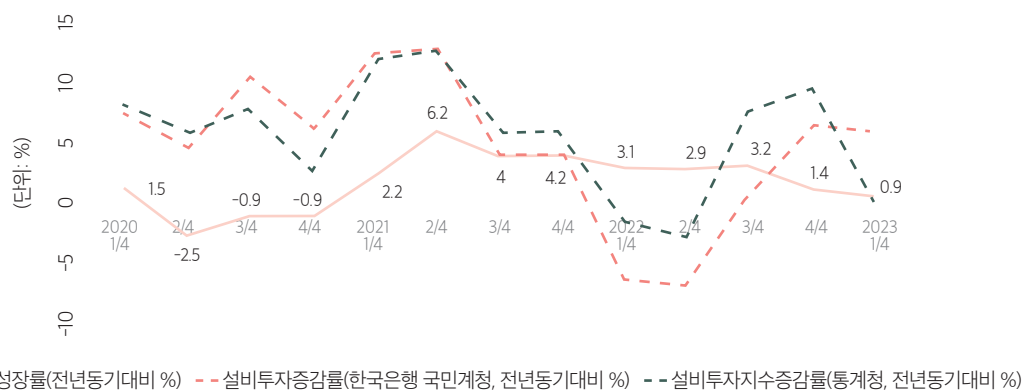
4)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기준

## 03 서울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재의 3고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질GDP가 하락하면 기업매출액, 투자지출, 소비지출도 함께 하락하는데, 이 중에서도 투자지출에 주목할 필요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2,161조 7,739억 원)에서 신규 투자를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sup>5)</sup>'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695조 4,283억 원) 수준
- [그림 5]에서 보듯이 설비투자 지출의 변동 폭은 실질GDP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 투자가 경기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투자는 자본재 수요증가를 통해 관련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고용증대와 소득증가로 연결되며, 고용과 소득 증가는 다시 소비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소비재 생산활동을 촉진

[그림 5] 한국경제의 경기변동 추이(2020년 1/4분기~2023년 1/4분기)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고로 인해 초래된 어려운 경제환경은 기업생태계 활력 저하 및 한국경제의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첫째, 3고로 기업의 투자연기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유동성 확보 유인 강화
- 둘째, 금리인상과 영업이익 감소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의 유동성 압박
- 셋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유망 스타트업의 생존력도 함께 저하
- 넷째, 경기침체로 인한 산출량 감소는 후행적으로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

3고를 둘러싼 복잡한 경제여건은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한계 중소기업에게 긴급 처방이 필요하나 당분간 인플레이션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중단할 수 없고, 급격하게 증가한 정부부채도 정책선택의 제약으로 작용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생산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의 강화, 생산자물가 상승은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자체 대응이 용이하지 않음

5) 총고정자본형성은 장기 생산에 사용되는 유형·무형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자본재 구입)을 의미하며,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가 이에 해당함

## 한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부실화·도산 등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신용대책 강구 필요

- 고금리와 시중은행의 경기순응적 행태로 인해 대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재정제약이 수반되는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보다는 예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과 같은 정책금융 수단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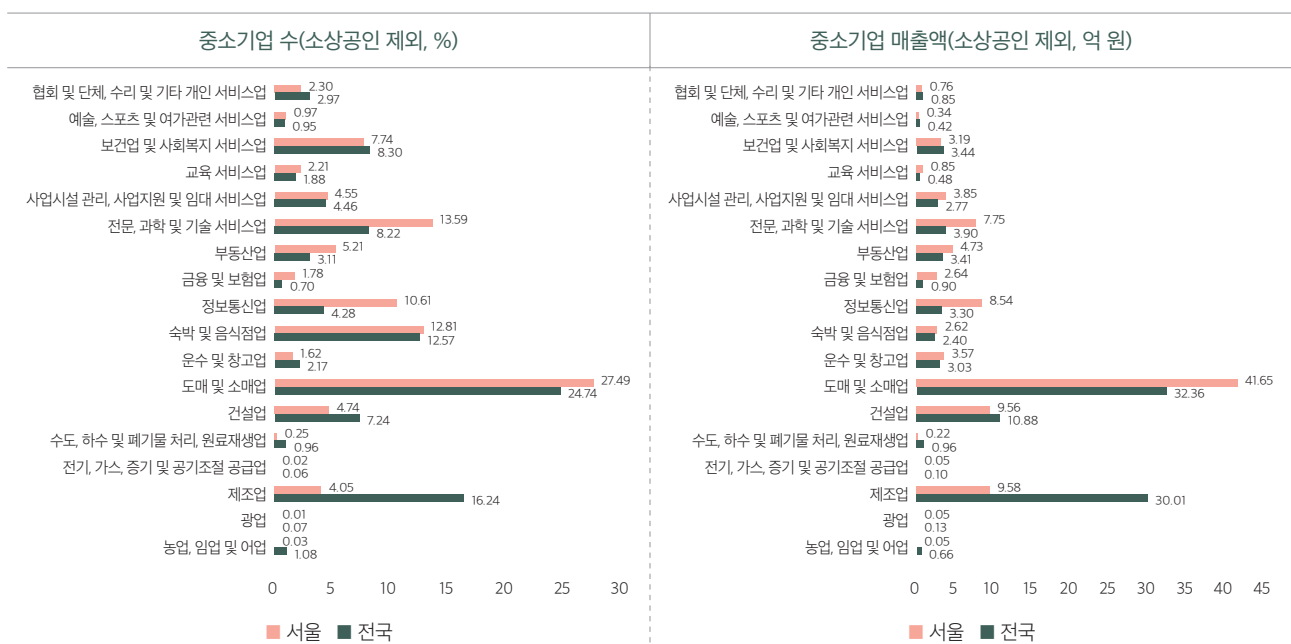
## 원자재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물류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

- 물류난 해소를 위한 운송수단 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필요
- 수출 유망품목 발굴,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수출전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필요
- 고용창출 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도 중요

## 서울은 벤처성장의 핵심 거점으로서 매출, 수출, 고용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별하여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델을 수립해야 함

- 2020년 현재 서울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의 25.6%(113,197개), 매출액 기준으로는 27.5%(469조 1,889억 원)를 차지하여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
- 서울의 산업구조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 비중(9.6%)이 낮고 도·소매(41.7%), 정보통신(8.5%), 전문·과학·기술서비스(7.8%), 금융 및 보험(2.6%)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1천억 원을 상회하는 서울지역 소재 '벤처 1천억 기업'은 총 177개사로 전국(739개)의 24.0%를 차지 (중소벤처기업부, 2022)

[그림 6] 서울의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2020년)



\* 주: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과 중기업 기준이며, 기업단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음. 동 기준에 의한 서울의 중소기업 수 비중은 전국(443,064개)의 25.6%(113,197개)를 차지하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국(2,986조 6,636억 원)의 27.5%(469조 1,889억 원)를 차지함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2022.4

혁신산업의 규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성과지향적 중소기업 정책 설계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거래 활성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중소기업 생태계의 체질개선 기회로 삼아야 함
- 전통산업의 틀에 묶여 있는 규제를 점검하여 디지털 재화시장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합리적 재정비가 필요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가져다주는 고용유지, 지역균형 발전에의 기여를 감안한 포용적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이 필요

- 현재는 산업구조와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현저한 것이 현실
- 이러한 여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 추진 시 경쟁정책과 포용정책의 조화가 필요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3년 및 중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2023, 「월간재정동향」, 2023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3,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한국은행, 2023, 「경제전망보고서」

<https://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kosis.kr>(통계청)

<https://www.oecd.org/>(OECD)

기획재정부, 2023. 4. 11, “국제통화기금, '23년 세계 경제성장률 2.8%,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2022. 11. 22., “2021년도 기준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 결과”